

동북아 3국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 중국·일본·한국의 비교*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머리말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현재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세계화(globalisation)의 대세 앞에서 시장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경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21세기의 비전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각기 전략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전략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세계화 시대에 경제가 중심과제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3국은 각기 여건을 달리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 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건이 다른 만큼 경제개혁의 내용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 이 글은 일본 中央大學의 人文科學研究所, 社會科學研究所, 政策文化總合研究所 등 3개 연구소가 공동주최한 『北東アジアの21世紀』 심포지엄(1999. 11.6)에서 발표한 논문을 약간 손질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기회를 빌어 필자를 주제발표자로 초청해준 위 人文科學研究所 소장 伊藤成彦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큰 틀에 있어서는 모두 시장경제질서의 수립 또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경제발전전략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정부 공식문서에 의거하여 이들 3국이 상정하고 있는 21세기의 비전과 경제발전전략을 살펴본 다음(2절), 그 실현을 위해 동북아 3국이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시장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개혁을 비교해본다(3절). 마지막으로 그 전망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4절).

2. 21세기를 향한 경제발전전략

1) 중국

중국은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리펑(李鵬) 총리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5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개요에 대한 보고」(1996.3.5)에서 향후 15년간의 국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의 21세기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경제발전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어 전통적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여, 시장조절 메커니즘의 작동을 원활히 하면서 정부는 거시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9·5계획(1996~2000) 포함 향후 15년간 양적 성장을 지양하여 조방형에서 집약형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하이테크·기간산업 및 3차산업의

집중발전, 지역간 불균형 및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중서부지역의 개발,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현대적 기업제도의 수립, 과학기술 및 교육 발전의 가속화, 대외개방의 확대 등. 이와 동시에 당면한 인플레이션, 실업, 농업 문제 등 사회불안 요인의 해결도 명시되고 있다.¹⁾

이 보고는 시종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특히 기업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그 중심에 놓고 있다. 즉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관건’으로 “1,000여 개의 대중형 국유기업(國有企業)을 개혁 즉 민유화(民有化)하여 법인실체와 시장경영의 주체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등, 사실상 ‘통일 개방되고 경쟁질서가 존재하는 시장체제를 적극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21세기 초반에 미국 및 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실현여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동안 개방개혁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중국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화에 타격을 받기보다는 편승한 측면이 큰 점,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일본 및 한국과는 달리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왔으며 거대시장을 배경으로 앞으로도 협상력을 견지할 것이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중국의 ‘야심’이 반드시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패권주의가 동북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우려도 수반될 가능성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이전에도 21세기의 비전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다소 기술적이었던 1980년대의 구상²⁾에 비해 최근 경제기획청의 발표는

1) 『中共中央委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計劃和2010年遠景目標的建議』에 제시된 것들을 요약한 것임.

2) 經濟企劃廳 綜合計劃局(編), 『21世紀への基本戰略』, 東洋經濟新報社, 1987.

1990년대 상황의 변화가 감안되어 보다 큰 틀의 경제개혁까지 포함한 발전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경제사회의 이상형과 경제신생의 정책방침』(1999.7)에 나타난 일본이 21세기에 지향하는 ‘이상적인 경제사회’는 ‘다양성과 창조적 변혁’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경제사회인데, 그 기본목표는 ‘최대자유와 최소불만’으로 설정되고 있다.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이 이상적인 사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①다양한 지혜의 사회, ②연소자, 고령 및 인구 감소 사회에의 대비, ③환경과의 조화, ④세계화에 있어서의 위상정립, ⑤정부역할 및 새로운 ‘公’의 개념 정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경제발전의 전략은 대체로 앞서의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계획』(1995.12)에 기초하면서³⁾ ‘다양한 지혜의 사회’에 상응한 지식 기반산업의 발전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확립’을 중심과제로 설정하여,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을 통한 시장구조의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자유·선택·도전을 중시하고, 교육에 충실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자본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맥·정맥 일체형의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정보화 및 행정효율화 등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변혁하는 기업경영’ 등 시장효율의 제고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官) 주도를 지양하여, 기업활동 및 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극력 축소함은 물론 정부기능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정부는 시장규칙의 정비, 위기관리, 안전망의 정비, 외부비경제 및 경기변동에의 대응 등으로 그 역할을 ‘순화(純化)’하겠다는 것이다. 그러

3) 그 주요 내용은 ①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을 통한 경제구조의 개혁, ②다이내믹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정비, 벤처기업 지원, 창조적 중소기업의 지원, 인재양성, 정보화에 상응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통한 신규사업의 전개 및 기존산업의 재구축, ③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정비, ④건전하고 활력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⑤활력있는 지역사회경제의 전개 등이다. 『構造改革のための經濟社會改革』, 經濟企劃廳, 1995.12.

면서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⁴⁾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룰(rule)을 만드는 등 세계경제의 주요 플레이어(play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21세기 비전이자 전략이다.

3) 한국

한국은 환란(換亂)이 발생하기 직전에 ‘세계 일류국가’의 포부를 담은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1997.10)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작성된 적이 있을 뿐 아직까지 이에 관한 종합적인 정부 공식문서는 없다. 그러나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동안 발표된 몇 개의 문건⁵⁾과 최근 산업자원부의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1999.1)을 통해 한국의 21세기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경제개혁의 방향을 추측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환란에서 이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여 그 문턱에서 좌절된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의 21세기 비전과 전략은 결여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통하여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경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새로운 발전전략은 시장주도, 지식주도, 세계친화적 경제발전전략으로 구성된다. 시장주도 전략은 규제철폐 및 경제활동의 자유화,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 시장기능의 보완 및 심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질서를

4) 이러한 기초하에 2010년 일본경제는 2% 성장, 2% 물가상승, 실업률 3.5% 이상 5% 미만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經濟社會のあるべき姿と經濟新生の政策方針』에서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여기에는 DJnomics로 더 잘 알려진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대한민국정부, 1998),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KDI 경제조정대책회의 보고자료, 1998.5),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21세기 경영인 클럽 초청 조찬 강연 자료, 1999.7.25) 등이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하였다.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식주도 전략은 지식의 창출, 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⁶⁾ 마지막으로 세계친화적 발전전략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규범에 상응하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수준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비전이자 전략이다.

이를 위한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역시 규제철폐 및 공정한 시장경쟁의 틀 마련과 같은 시장질서의 확립이다. 시장기능의 보완 및 활성화도 언급은 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지향이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점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기초로, 지식·정보혁명을 이룩하고 세계화의 물결에 능동적 대응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재결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함으로써 ‘꿈에도 그리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란을 겪음으로 인해 ‘세계 몇 위’기는 ‘동북아 중심국’으로 톤다운(tone-down)되었지만 ‘열린 시장경제’의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환란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6) 이는 한국경제의 중심을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시키겠다는 정책당국자의 강조와 맥을 같이한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강연(앞 자료, 1997.7.25.)에서 21세기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였다.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1999~2003 기간 중 지식기반 유망 신산업-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등 14개 제조업과 영상·음반, 인터넷 등 17개 서비스업-에 총 119조 6,000억 원의 투자(제조업 63조 3,000억, 서비스업 57조 3,000억)가 소요된다고 한다(산업자원부, 앞 자료 참조).

7) 환란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GDP는 2010년에는 세계 8위, 2020년에는 7위로 전망되었다. 또한 1인당 소득은 각각 2만 2,000달러와 3만 2,000달러, 제조업 중 첨단산업의 교역비중은 31.6%와 44.5%로 전망되었다. KDI의 앞 자료(1997.10) 참조.

3. 시장경쟁과 산업정책

이상에서 보았듯이 21세기를 턱 앞에 두고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시장질서의 수립 내지는 확립을 경제개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하면서도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이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왜곡의 정도나 경제발전의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들 3국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시장개혁의 방법이나 현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이들 3국이 현상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구조개혁의 실제 내용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시장경쟁

중국은 그 동안 시장지향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자시장 등장한 데 이어 공급부족의 시장경제를 초과공급의 시장경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섬유 40% 가량이 과잉설비며 초과공급의 전자 품목수도 1995년의 66.5%에서 1996년에는 75%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계속된 고도성장 하에서 주요 공업의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⁸⁾ Kornai (1980)에 의거할 때, 이는 시장이 경쟁적인 구조로 개혁·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진전은 무엇보다도 개혁에 의한 향진(鄉進)기업과 개방에 의한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라 경쟁이 촉진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국유기업의 36.9%가 주된 경

8) 좀 더 자세히 보면 PC와 필름은 25% 미만, 에어컨, 복사기, 전자오븐 등은 30%, 컬러TV, 자동차 등은 40%, 전화기와 카메라는 50% 가량이다(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中國工業發展報告』,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7 참조).

쟁자를 향진기업으로 지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⁹⁾ 한편, 생산액 중 외자기업의 비중을 보면, 제1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서는 각각 1.9%와 6.4%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2차 산업에서는 23.0%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1차 산업에서도 석유 및 가스 채굴업은 8.4%로, 제3차 산업 중에서는 전력증기열수 공급업이 1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2차 산업에 속하는 전기 및 통신설비업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은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國家統計局, 1997). 시장개혁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중국은 시장의 힘에 의한 국내경제의 통합효과도 거두고 있다. 과거 고질적이던 지방보호주의가 비록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폭 타파되어 국내의 경제통합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1996년 사회과학원의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의 76.4%가 지역장벽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

요컨대 중국은 그 동안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단순히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급진전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개혁의 요체가 시장창출만이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의 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시장개혁은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를 저지할 요인은 별로 없으므로 21세기를 통해 중국이 크고도 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과 한국의 시장은 여전히 과점적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이를 정확히 보기는 어려우나, 일본은 3대기업의 집중도(CR3)가 평균 49.34%에 달하고 한국의 경우 3대기업의 집중도가 60% 이상(CR3>0.6)인 품목수가 60%를 넘는 데 비해 중국은 4대기업의 집중도(CR4)는 12.3%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중국의 시장이 일본이나 한국의 시장보다 오히려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한동훈·이근, 『중국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건너뛰는가』, 《경제발전연구》, 제4권 제2호, 1998에서 재인용.

2) 산업정책

이렇듯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과 한국의 시장이 독과점적인 것은 양국의 산업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과 한국은 국가의 산업정책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 역시 낮으면서 중앙정부의 조직체계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정책이 강력하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다. 재벌 내지는 기업집단 체제와 낮은 외자기업의 비중도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1990년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의 산업보호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정책은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더불어 이와 같은 유리한 국제경제환경의 효과는 소진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은 정부개입의 축소, 시장기능의 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정책의 중점을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일(韓日) 양국의 시장개혁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이 국가의 산업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효과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르다. 일본은 기술혁신에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술정책과 긴밀히 연계시켜 혁신(innovation)을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으로 산업정책을 활용한 데 반해 한국은 주로 수출드라이브에 산업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일본은 기술혁신에 힘입어 산업구조조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은 시장의 진입장벽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왔으며, 그만큼 시장구조의 개혁이 현재에도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중국에는 없었다. 물론 1980년대 후반에 초보적인 산업정책의 개념이 존재하여 산업정책사(産業政策司)가 설치되고(1987년) 국무원의 「산업정책 요점」(1989년)이 발표된 데 이어 1990년대에 들어와 「90년대 산업정책 요강」(1994

년에 의거 자동차산업의 정책이 수립된 적은 있으나, 그것은 지도성 계획과 대중적 개입에 한정된 것으로 한일 양국과 같은 체계적 개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에 비해서는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¹⁰⁾ 그나마 중국의 ‘산업정책’은 효과적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의 발전은 주로 시장화과정에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된다.¹¹⁾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은 외자기업의 진출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의 개혁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다. 중국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4. 맺음말: 상호 경쟁 혹은 협력?

이렇듯 시장구조의 개혁에 있어 중국, 일본, 한국 3국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한국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의 시장구조가 한일 양국에 비해 오히려 더 경쟁적임을 우리는 보았다. 이는 체제전환과 내부개혁 사이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WTO체제하에서 한일 양국도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시장구조가 점차 경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이어지는 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구조는 경쟁적으로 개혁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이든 개혁이든, 이를 통해 중·일·한 동북아 3국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적

10) 이에 대해서는 김익수,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을 참조.

11) 이러한 견해는 한동훈·이근, 앞의 글에서 피력되고 있다.

어도 당분간은 자국 국제경쟁력의 강화이다. 각각의 경쟁력강화 추구는 서로간의 경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장의 개방과 시장경쟁의 활성화 그 자체가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경제협력의 전부는 아닐뿐더러 실제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안될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시장개방과 시장질서의 수립 내지는 확립을 통한 자국 경쟁력강화의 추구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이 자동적으로 상호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기대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협력에 앞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될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상호부조의 논리와 경쟁논리와는 구별되는 연대의 논리로 보완된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리가 필요하다. ‘세계화’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에 지배되면 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¹²⁾ 이렇게 볼 때,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앞에서 본 동북아 3국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의 목적의식적 조정 및 조율을 필요로 한다.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3국의 산업 현황과 전망 등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여 실천가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협소한 경제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보다 광범한 차원에서 각국의 경제발전전략을 상호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의 주요 3국이 자국 중심의 21세기 발전전략을 상호 협력의 틀에서 수정하고 상호 조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대환 Dae-Hwan.Kim@inha.ac.kr

12) 이와 관련해서는 김대환, 「세계화를 넘어서: 세계화와 국민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계간 사상》, 1998년 겨울호 참조.

참고문헌

- 강봉균. 1999,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 21세기 경영인 클럽 초청 조찬 강연자료.
- 김대환. 1993, 「北東亞經濟圏の浮上と韓・日の役割」, 《포라-ム》, 3月號.
- _____. 1998, 「세계화를 넘어서: 세계화와 국민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계간 사상》, 겨울호.
- _____. 1999, 「동아시아 경제개혁의 비교연구 서설」,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를 다시 묻는다’) 발표논문, 서남재단, 10. 1.
- _____. 2000a, “Privatization in Korea,” in *Korea's Economy 2000*, American Institute of Korean Economy, Washington D.C..
- _____. 2000b, “Globalisation and an IMF-Controlled Economy: The Case of Korea,” 《경제발전연구》, 제6권 2호, 12월.
- 김익수. 1993,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정책자료 95-01.
- _____. 1996,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 정책자료 96-01.
- 대한민국정부. 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대한민국 정부.
- 산업자원부. 1999,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대한민국 정부.
- 한국개발연구원. 1998,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 경제조정대책회의의 KDI보고자료.
- _____. 1997,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정책자료.
- _____. 1998,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와 DJ노믹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동훈·이근. 1998, 「중국은 동아시아 모델을 건너 뛰는가?」, 《경제발전연구》, 제4권 제2호.
- 經濟企劃廳(編). 1987, 『21世紀への基本戰略』, 東洋經濟新報社.
- _____. 1999, 『構造改革のための經濟社會計劃』, 東洋經濟新報社.
- 經濟企劃廳. 1999, 「經濟社會のあるべき姿と經濟新生の政策方針」.
- 國家統計局. 1997,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1997, 『中國工業發展報告』,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 Aoki, M. et al.(eds). 1995,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ne, D. & Kassim, H.(eds). *Beyond the Market*, London: Routledge.
- Kornai, J. 1980, *Economics of Shortage*, Amsterdam: North Holland.